■ 여야, 정기국회 전략과 쟁점

인사청문·재보선·예산 …‘산넘어 산’

여야는 이번 한 주 정기국회 전략 수립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금명간 이뤄질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쟁점 법안, 새해 예산안,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 등 여야가 충돌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에 10·28 재보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여야는 가파른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중점

민주당 SOC 예산 확보 등 주력

◇한나라당=민주당의 파상적인 정치공세가 예상됨에 따라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철저하게 민생국회, 정책국회로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4개월간 미디어법 외에 처리된 법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권의 대대적인 친(親)서민행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민생법안 처리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민살리기 5대 법안과 25건의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한 한나라당은 금주중 중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간 격돌이 예상되는 공영방송법, 세종시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정의 새틀짜기 지원에 나선다.

이번 개각이 이명박 정부 집권 2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데다, 개각 명단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청문회장에서의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개헌, 선거제도 개편, 행정구역 개편 등 세가지 과제중 어느 하나도 야당의 호응이 없을 경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한 대야(對野)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정기국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이 친(親) 서민행보에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정국주도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서민정책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정책경쟁으로 대안·수권정당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민생예산으로 돌리는 게 핵심 목표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편중으로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과 지방교부세 예산 등 민생·취약계층 지원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모토로 맞서 ‘반서민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 사이에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개각 단행 후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천성관 낙마’ 때처럼 철저하게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 제1야당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세종시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은 우선 처리하되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시국법안은 저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는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모정국에서 벗어나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과 혁신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벼르는 민주당

현정부 실정 ‘결정적 한방’ 파헤쳐

10월 재보선 유리한 고지 선점 의도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다. 미디어법 파동 이후 장외투쟁을 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정국을 지나 전격적인 등원 선언으로 의사당에 들어가는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 제대로 싸우겠다”는 등원의 명분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감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어서다.

이 때문에 여야간 신경전으로 국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일찌감치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30일 “이번 국감이 갖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 각별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고위직 인사의 문제점과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국감을 통해 현정부 심판론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복안도 엿보인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취임 후 전문위원들이 매일 작성하는 현안 보고서도 국감 준비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공동으로 국감 상황실도 운영하고 내달 3일 의원 워크숍에서 국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지도부는 ‘카운터 펀치’를 날릴 ‘국감 스타’ 배출에 당력을 지원키로 했다. 벌써부터 일부 의원실은 “반드시 한 건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시에 보좌진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한 달 넘게 땡볕에서 벌여온 미디어법 장외투쟁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으로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이지만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은 정책자료를 챙기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

외통위의 박주선(광주 동) 의원은 남북문제 관련 정책자료집 3권을 준비 중이다.

정무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최근 한 달 동안 금융위와 공정위 등 피감기관에 270여개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행정안전위 김유정 의원은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사태에서 제기된 공권력 남용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19건의 경찰 관계법을 살펴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돈·권력 없어도 기회 보장되는 사회를”

광주 온 이재오 전 최고

정치재개를 앞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돈과 권력이 없어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소프트파워로 국가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나라사랑 기도포럼’ 초청으로 이날 오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가진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5년 안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 권력·정권으로부터 부담이 없는 이명박 정부가 그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이 50년, 100년 후에 세계의 중심이 되려면 안으로는 가장 살기 좋은, 깨끗한 나라를 만들고 밖으론 대륙을 넘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제·문화 공동체를 이뤄야 한다”며 대륙을 철도로 잇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에서 두만강,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노선과 신의주, 중국 베이징, 중앙아시아를 거쳐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잇는 노선,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노선을 건설해야 한다”며 “노선 중간에 교포 자원을 활용해 경제·문화공동체 도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희태 양산 재선 올인 태세

정몽준 대표직 승계 예상속 행보 관심

오는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박 대표는 31일 또는 내달 1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나라당 지도부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희태 대표의 한 측근은 30일 “지역언론에서 실시하는 유력후보 인터뷰에 응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며 “31일 또는 9월1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양산 공천을 놓고 예비후보 진영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박 대표가 금주초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게 박 대표측의 설명이다.

각종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출마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공천 전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는 셈이다.

한편 박 대표가 선거 채비를 본격적으로 갖춤에 따라 대표직 사퇴 시기에 대한 당내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승계가 예상되는 정몽준 최고위원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망(大望)’을 꿈꾸고 있는 정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발판삼아 차기 대권주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동영 복당론 점화

민주연대 워크숍서 공감대 형성

복당시켜야하나? (복당)시기는?

무소속 정동영 의원에 대한 복당론이 민주당내에서 본격 점화될 조짐이어서 또 한차례 회오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대통합을 추진하면서 지난 4·29 재선거 과정에서 탈당한 정 의원의 복당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의 비주류연합체인 민주연대가 전북 완주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이 모임 고문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회복귀 이후 정 의원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집회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정치적 결사체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걸 최규성 의원 등 1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민주연대 워크숍에서 정 의원의 복당문제가 정식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대는 지난 4.29 재선거 직후에도 공식성명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초래된 당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민주개혁 진영의 대연합, 총단결을 통한 이명박 정부 심판과 민주주의 전진의 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정 의원 복당론을 제기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